

IMPACTON 2024 Special Report

# 글로벌 10대 주요인권 리스크 분석

---

## 서문

최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 지침(CSDDD)이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공급망 인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력사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건 발생 시 ▲대규모 집단소송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사업지연 및 투자 중단으로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방대한 인권 분야의 리스크를 어디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사건사고 속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권 관리를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팩트온은 주요 글로벌 기업의 인권 보고서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기업 인권 네비게이터를 분석해 10개의 주요 인권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각 이슈 별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과거 발생했던 주요 사건사고와 이로 인해 수반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하여 기업들의 인권 리스크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CONTENTS

---

### [인권 리스크 파악 기초 개념]

인권 리스크 파악 프로세스 4p

---

### [10대 주요 인권 이슈 분석]

01 사이버 보안	5p
02 산업안전보건	8p
03 강제노동	11p
04 집회의 자유	15p
05 공정임금 및 채용	19p
06 차별 및 괴롭힘	23p
07 아동노동	27p
08 원주민 권리	31p
09 근로환경	36p
10 분쟁광물	39p



# 10대 주요 인권 이슈 분석

기업의 인권 리스크 및 중대인권이슈 파악을 위해, 각 인권 이슈별로 주요 글로벌 트렌드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분석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 기업 인권 네비게이터의 리스크 분류에 따라 크게 법적 리스크, 이해관계자 리스크, 재무·운영 리스크로 구성됩니다.

## 01 사이버 보안

### 글로벌 트렌드

- EU의 GDPR이 전 세계 정책 트렌드 견인 중. 미국도 개인정보보호침해 관련 집단 소송 자주 발생

### 법적 리스크

- 미국, EU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국민이 핵심권리로 규정. 기업이 이를 침해할 경우 최대 수 조 원대 과징금

### 이해관계자 리스크

- 다수의 사건 발생으로 소비자 신뢰도 낮은 편.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고객 이탈 가능성 80%

### 재무·운영 리스크

- 국내는 아직 낮은 편. 해외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침해 리스크로 광고주 이탈, 주가가 급락하기도 함

### 글로벌 트렌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은 EU와 미국입니다. 특히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은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 일본, 브라질 등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GDPR을 벤치마킹해 관련 법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GDPR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 권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침해로 인한 집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송에 의한 피해보상금액도 많게는 수 조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유출 ▲수집한 개인정보 광고 및 정치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 ▲개인정보 오용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억달러(당시 기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 유해 콘텐츠, 위기관리 체계 수립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 리스크**

미국과 EU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를 국민의 핵심권리로 규정하고, 기업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 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일례로 GDPR법안 위반으로 인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의 경우,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무려 13억달러(약 1조 7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IT업체를 넘어 제조업이나 운송 등 다양한 섹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영국 항공(British Airways)에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약 4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2000만파운드(약 33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테슬라에서는 1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임직원, 고객, 협력사 개인정보와 고객의 차량 카메라 녹화영상이 무단 유출된 바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GDPR이 지정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전체 매출의 4%)을 부과받을 경우 무려 33억달러(약 4조 7000억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비IT기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AI 권리장전 (AI Bill of Rights)을 발표했는데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5대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별 개별 동의 취득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리스크 분석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고지 의무 강화 등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리장전의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AI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과징금의 수준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2-2023년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건수는 142건이며, 평균 과태료 규모는 약 1억원이었습니다. 실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무단수집이 적발되더라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해 해당 분야의 관리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이례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혐의로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국내외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건사고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부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낮은편입니다.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디지털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가 19개국 47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68%가 “온라인 개인정보에 민감하다”고 답했으며 80%는 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을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중단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도 해당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웨덴 국가연금펀드(AP), 아문디, AXA 등의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업계에 주주 안건을 제출해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알고리즘 통한 노동자 차별 및 인권 침해 문제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AI 사생활침해에 대한 집단소송 및 법제화 결과에 따라 AI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향 및 리스크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버드 법학 기술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은 온라인 공개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AI의 학습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법적 규제에 의해, 기업이 IT서비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메타(페이스북)의 경우 개인사용자의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해 사진에 자동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으나, 생체정보수집이 위법으로 결론나면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량의 합의금을 물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빅테크기업의 AI알고리즘 작동방식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는데요. 집단소송 혹은 법제화의 결과로 개인정보수집 및 사용방식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가 의무화된다면 AI서비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개인정보침해사건이 과태료 이상의 재무적 리스크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 게재를 중단하거나,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페이스북에 대한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커지자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게재를 대거 중단하면서, 지난 2월 주가가 26% 급락하는 등 재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 02 산업안전보건

### 글로벌 트렌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법적 리스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시 주주행동, 불매운동 등의 리스크 발생 가능

### 재무·운영 리스크

· 사건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기업의 매출 감소, 이는 주가 하락, 주주행동 등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2022년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언론 기사 수/임팩트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언론 기사 수 (KOSPI 200)					
2022년	근무환경	사업장 안전 보건 위반	불공정관행	소비자이슈	도덕성
1월	65	692	22	52	37
2월	176	128	22	13	2
3월	65	291	61	2	0
4월	12	180	53	0	0
5월	21	121	7	0	0
6월	176	53	20	4	2
7월	978	37	20	1	2
8월	157	20	26	0	0
9월	22	58	21	12	1
10월	51	89	8	2	0
11월	11	48	38	7	0
12월	11	19	2	0	0

### 글로벌 트렌드

‘산업안전보건’은 국내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권 이슈입니다. 실제 임팩트온과 후즈곳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요 인권 이슈 중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또한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발생하기도 하며, 투자자들은 해당 분야 개선을 위해 주주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망이나 중상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규모가 많은 것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고위험 산업에 대한 현장감사 수행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국내 기업 또한 미국에서 산업안전보건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리스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한국 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는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실형선고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의 전수조사, 청문회 소환 등으로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단일기업 최대치인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3년, 부산 연제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DL그룹의 이해욱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건설업계 총수로서 처음 출석했습니다. 해당 청문회에서 노농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DL이앤씨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초래되는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소액의 과태료를 납부한 후, 단기적인 평판 리스크에 대응하면 됐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차원에서 주주행동이 발생하거나, 불매운동 등의 소비자 행동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 빌딩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 1월에는 공사중 이던 화정 아이파크 단지가 붕괴해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주주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HDC측은 주주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용해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및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Preamble)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인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SPC그룹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의 안일한 대처로 장기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상반신이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측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측은 인터록이 없는 기계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감식이 끝나지 않아 선혈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천을 덮어놓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SPC그룹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더욱 점화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도 공장 운영을 계속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구 공장에 파견 ▲빵 제조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조문품으로 자사 단팥빵 제품 전달 ▲SPC그룹 회장, 질의응답 거부한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문만 발표 ▲공식 사과문 발표 이전 유족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구체적 보상안 미제시 ▲SPL 사내 게시판에 회사 비방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 게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SPC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국내의 경우, 인권 리스크가 실제 재무적 리스크로 심화되는 경우가 적은편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폭증하면서 사건사고로 인한 리스크가 재무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 붕괴 사고 이후, HDC의 사업브랜드 평판에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면서 사고 발생 후, 시가총액이 나흘 동안 4580억원이나 증발했는데요. 이에 주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은 'HDC현대 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에 참가해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SPC의 경우도 사망사고 발생 후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이어졌는데요.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SPC브랜드의 제품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매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품 목록이 퍼지면서 23년 하반기에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는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뜨 등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가맹점주들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 03 강제노동

### 글로벌 트렌드

·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강제 노동에 대한 인권 리스크가 높은 국가 중 하나

### 법적 리스크

· 미국과 EU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이주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은 아태지역의 강제노동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

### 재무-운영 리스크

· 강제노동 연루 시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가 중단될 수 있음. 중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로 산업계는 운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음

## 글로벌 트렌드

강제노동은 국내에서 관심도가 비교적 적은 이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해당 이슈가 우리나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 리스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이슈는 인권 분야에서 매우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공급망에서 이를 근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제노동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이슈에 연루될 경우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사업적 리스크가 굉장히 큼니다. 이에 공급망 현지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평가와 협력업체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법적 리스크

(그림) 신장 위구르 지역의 주요 수출품/ Source Intelligence

품목명	수출규모	비중
의류	45억달러	25.4%
신발	18억달러	10.2%
전자 장비	16억달러	9.1%
기타 장비	11.5억달러	6.6%
장난감 및 스포츠 제품	9억7천만달러	5.5%
플라스틱	7억5천만달러	4.2%
자동차 부품	7억1천만달러	4.0%

강제 노동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은 편입니다. ILO에 따르면 강제노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요구 ▲강제노동 불이행시 처벌 및 불이익 부과 등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강제노동에는 ▲이주 노동자의 여권 몰수 ▲ 노동자 강제 고립 ▲비자발적 초과근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부과(승진 누락 등) ▲불공정 임금제도를 통한 초과근무 유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EU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기반이 된 OECD실사 가이드라인은 강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를 들어 협력업체에 과도하게 촉박한 납품 기일을 제시하는 것 등을 주요한 인권 리스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에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출의 요충지인데요. 이에 의류, 전자장비,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세계 폴리실리콘의 35%, 알루미늄 9%를 공급하는 원자재 주요 공급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동차, 태양광, 의류업계 등은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무려 100만여명에 달하는 위구르족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져 세계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신장위구르산 원자재나 제품 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장 위구르산 알루미늄 제품을 억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의 대상을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 인원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에 반해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노동의 날, 이주노동자 200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정부와 고용주 측이 취업비자를 무기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강제노동에 시달려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 수요 미스매치, 지역 내 노동자 유출 등 여러가지 문제로 해당 이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공급망 실사법이 국내 기업에게 적용된다면, 해당 문제가 큰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빌미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강제노동의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유니레버, 코카콜라 등의 주요 글로벌 기업의 현대판 노예 제도 근절 선언(Modern Slavery Statement)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대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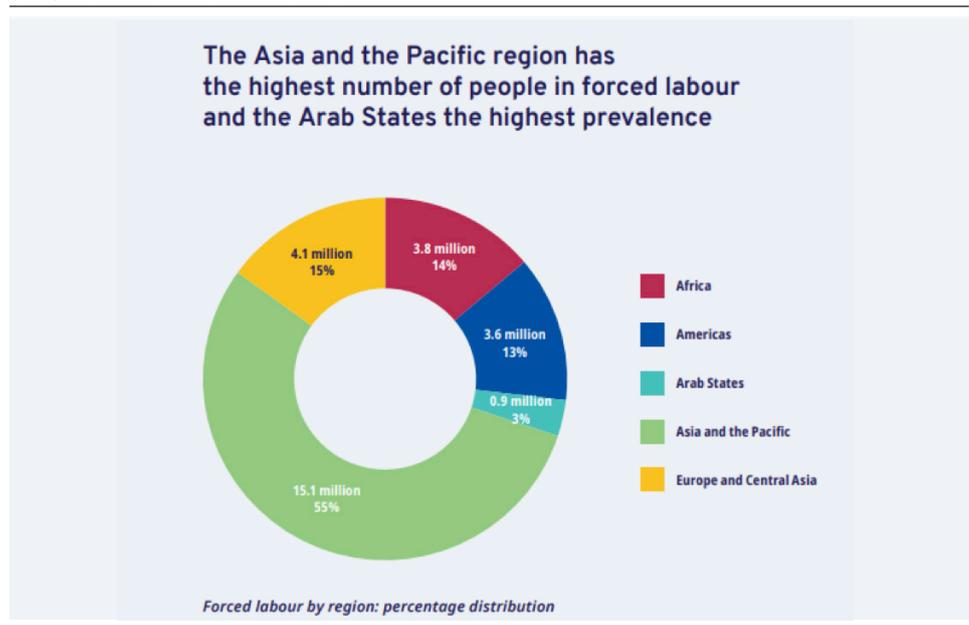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경우, 아태지역의 강제노동 리스크를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강제노동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5%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요 인권단체, 싱크탱크 등도 해당 지역의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5월, 영국의 셰필드 할람 대학교는 태양광 공급망의 위구르의 강제 노동 연관성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위구르 지역 주민의 현지 인터뷰, 위성사진 등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위구르 신장 지역의 주요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위구르인들을 생산과정에 투입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HRW)는 폭스바겐, 토요타, GM 등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의혹이 있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알루미늄 산업이 신장 위구르 강제수용소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 또한 강제노동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농업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주로 불법 이민자들을 착취해 노동을 강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신장 세계 강제노동의 지역별 비중/LO



실제 지난 2023년, 윤리적 소비자 연구연합(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은 스페인 남부지역 농업 공급망의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제3자 인력업체를 통해 수확기에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주민, 과부, 다자녀 가구 등 금전적 필요가 시급한 이주 노동자를 중점적으로 고용하고, 노동자들의 개인 사정을 악용해 무급초과근무를 강요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유통업체 9곳 (테스코, 세인트버리, 마크 앤 스펜서, 알디 등)이 해당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미국과 EU가 신장위구르 연루 제품을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산업계는 신장 위구르 소재 기업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개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강제노동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9년 발간된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사용기업과 타 지역의 기업을 매칭해 물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실사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례로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을 조사중이던 실사 전문업체 민츠그룹을 급습해 중국인 직원 5명을 체포하고 사무실 운영을 강제 중단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HRW는 공급망 맵핑을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원자재 수입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강제노동에 연루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로 인해 총 100조원에 달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려 65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덴마크의 연기금 AP Pension, 노르웨이 DNB은행은 연루 기업에 대한 투자중단을 선언한 뒤 지분을 매각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관련 기업에 공식서한을 작성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04 집회의 자유

### 글로벌 트렌드

· 집회의 자유는 노동자 권리의 근간. 공급망 인권 리스크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제

### 법적 리스크

· 플랫폼 노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원청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지역별로 노동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권 리스크가 다름. 현지 정부나 기업의 조직적인 반 인권적 환경에서 효과적인 감사와 대응이 필요

### 재무·운영 리스크

· 글로벌 투자자들은 노동인권에 대한 집단적 행동에 민감함. 이는 기업의 지분 매각이나 주주 제안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

## 글로벌 트렌드

‘집회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이나 탄압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이나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집회가 구성된 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표현의 자유, 노동자 대표 선출의 자유, 사측과의 협상 자유, 파업 등 집단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노동자 권리의 근간으로 공급망 인권 리스크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조합, 노동인권단체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으며, 10대 주요 인권 이슈 중 산업안전보건 다음으로 국내 언론보도 빈도가 높은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이행과 실질적 규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사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리스크의 변화가 큰 이슈입니다.

## 법적 리스크

국제적으로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대두와 함께 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청기업과 같이 근로계약관계 없는 제3자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되고,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원청의 교섭의무가 보다 광범위해지는 추세로,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공동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상태인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고, 2024년 1월 2심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재추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에서도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제한과 함께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U공급망 실사법(CSDDD)은 집회의 자유를 실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SDDD는 결사의 자유, 집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권리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에 따라 해석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U공급망 실사법이 15일 EU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국제규약에 걸맞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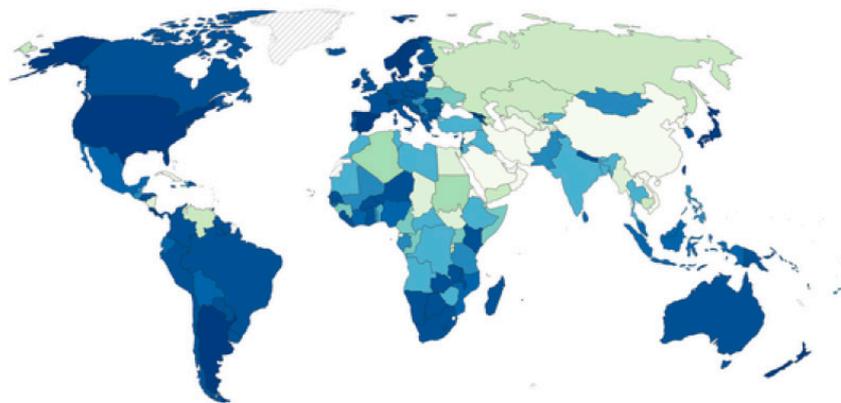
**이해관계자 리스크**

국가별로 노동조합 법의 수준, 노동자 탄압 여부, 현지 노동 관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권 리스크가 크게 차이납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노동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림) 지역별 집회의 자유 지표/ OECD

**Freedom of association index, 2022**

Based on the expert assessments and index by V-Dem<sup>1</sup>. It captures the extent to which par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form and operate freely. It ranges from 0 to 1 (most free).



Data source: V-Dem (2023)

OurWorldInData.org/democracy | CC BY

인권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자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지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제3자 감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이해관계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의류업체 인디텍스(Inditex)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비영리단체 베타워크 (BetterWork)의 감사 프로그램에 의존해 캄보디아의 노동자 인권관리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협력사 중 하나인 SYSG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감사에서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을 통해 해당업체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인민당이 설립한 캄보디아 노조 연합만 적법한 노조로 인정되며, 독립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정부차원의 탄압과 집단행동에 대한 사실 은폐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조직적으로 반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현장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옥스팜과 같은 인권단체는 현지 비영리단체나 노동조합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수립해 집회의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디텍스 또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지 노동단체와 연락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직접 노사단체교섭을 주도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집회의 자유가 높게 평가된 지역에서도 노동자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노동자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일례로, 연대 파업이 금지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북유럽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연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스웨덴의 경우, 법적으로 노사관계 및 노동자 집단행동을 규정하기보다는 노사측의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에, 스웨덴 노동자의 약 90%가 단체 교섭으로 인한 노동조건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지 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절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스웨덴 금속 노조 IF Metall은 테슬라에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파업을 돌입했는데, 테슬라와 이해관계가 없는 스웨덴과 북유럽의 노조들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행동을 가담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지역별 관행이나 문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국제적으로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요 연기금인 펜션 덴마크(Pension Danmark)는 2023년 12월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응해 70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션 덴마크는 성명을 통해 "테슬라가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현재 투자자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동퇴직기금(NYSCRF)과 뉴욕시 은퇴시스템(NYCRS)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스타벅스, 월마트,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집회의 자유와 단체 교섭을 포함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제3자 감사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 NYCRS가 주축이 된 스타벅스 투자자 연합의 주주제안은 52%의 지지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 05 공정임금 및 채용

### 글로벌 트렌드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 확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의 고용주 착취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법적 리스크

- 하청 노동자 또한 원청 기업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채용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 정부와 기업이 미온적 대응으로 국제적 리스크도 증가 추세

### 재무·운영 리스크

- 공급망에서의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은 인권 감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 글로벌 트렌드

공정임금과 채용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번째는 생활임금(Living wage, 해당 지역에서 기본적 삶을 유지에 필요한 임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활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의 간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분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동자 간 차별 문제입니다. 성차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차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번째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입니다. 국내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과태료는 실제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는 이주노동자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지 고용주나 인력사무소 등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도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명 이상이 적정 생활 유지를 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UNGC는 생활 경비, 현지 인건비, 현지 시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생활임금 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업체, 공급망 파트너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

국내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환경, 저임금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리스크 또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제조업 전체에 보편화된 전산관리시스템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원청의 주요한 작업 지시 수단으로 인정하여 업체에 미칠 파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 내 원청기업은 불법 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문제와 소송 및 처벌 대응에 따른 재무적, 법적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청근로자는 원청근로자와 비교해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지만, 임금은 5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이 한 달 이상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권 이슈와 달리, 공정임금 및 채용의 경우 인권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처벌 강도가 약한편인데요. 일례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과태료는 건당 1천만원 정도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집단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큰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임금 체불’은 노동 인권 분야에서 가장 집단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요. 2000년대 초반 연간 소송건수는 약 1500여건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8500여건까지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피해 보상금액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금액 기준) 임금 관련 소송 상위 10건의 보상금 규모는 약 2억9500만달러(3837억원)였으나, 2021년에는 보상금 규모가 약 6억4000만달러(83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이해관계자의 경우, 주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채용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에 비해 불공정임금 및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비율이 두배 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고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2017년 780억원, 2018년 970억원였던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최근 5년간 급증해, 2023년 1215억원에 달했습니다. 신고자 수에 있어서도 전체 신고 노동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으로 대략 10%입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4% 정도가 이주노동자인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주노동자평화연대는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기 때문에 선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대며, 초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권표준에서 해당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EU공급망 실사지침이 도입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국내 기업의 임금체불문제가 주목받을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중동지역의 이주노동자 대우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동지역의 이민노동자들은 주로 현지 인력업체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채용 수수료, 여권 박탈, 노동 착취 등의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미 네옴시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원주민 강제 이동, 건설노동자 불공정 대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권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유럽 투자기관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실질적 행동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자사가 투자한 G4S가 중동의 인권 이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분을 매각했고, 덴마크의 주주들은 운송회사 DNV에 네옴시티 투자계획 발표 이후, 간담회를 갖고 해당 지역의 인권 리스크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불공정 채용 문제는 해당 지역의 채용 관행 및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로 인해 인권 감사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공급망 인권 감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기업의 노동자 채용에는 수십 개의 인력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를 알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채용 프로세스를 담당하거나, 노동자 고충처리체계를 수립해 불공정 채용에 대한 신고 및 보상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공급망 임금체불 및 불공정채용 문제는 해당 지역의 채용 관행 및 복잡한 채용 프로세스로 인해 인권 감사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공급망 인권 감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기업의 노동자 채용에는 수십 개의 인력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노동자를 알선하기 때문에 인권 감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직접 채용 프로세스를 담당하거나, 노동자 고충처리체계를 수립해 불공정 채용에 대한 신고 및 보상을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에서 1위를 차지한 유니레버는 2021년 인권 경과 보고서에서 공급망 불공정 채용 (채용 수수료) 문제를 인권 관리체계 운영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유니레버는 직접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약 500여명의 감사인들에게 불공정 채용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감사를 강화하고,

불공정 채용이 발생하는 협력사에는 경고 조치 및 협력관계단절(반복 될 시)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는 현금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현지 채용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인권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인권 리스크의 수준과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MPACT ON

## 06 차별 및 괴롭힘

### 글로벌 트렌드

-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가장 와닿는 이슈.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음

### 법적 리스크

- 사회적 관심 증가로 국정감사 및 특별근로감독에 의해 동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제3자 인증기관의 감사 체제가 아닌 직접적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재무·운영 리스크

- 기존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 인권단체는 직원과 경영진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고충처리 거버넌스라고 권고

### 글로벌 트렌드

‘차별 및 괴롭힘’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가장 와닿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7월, 직장갑질119가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33%는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피해자 중 1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경험한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빈도는 적은 편인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성추행 등의 민감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 내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의 경우, 아태 지역 의류, 팜유 공급망 등 일부 산업에서 차별 및 괴롭힘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EU공급망 실사법(CSDDD)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급망 내 차별 및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집단 성폭력 등의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본사가 부담해야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 법적 리스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된 이래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171건입니다. 일 평균 19.3건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6%이며, 과태료의 금액도 최대 1천만원이기에 해당 이슈에 대한 법적 처벌수준은 경미한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거나, 기업 임원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네이버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IT업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IT업계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前전 대표가 소환되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 이후, 네이버는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이슈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사건이 조명거나 특별근로감독이 수행될 경우, 해당 문제가 인권 분야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IT업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수행하자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임금체불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로 ▲노사협의회 운영위반 등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에는 이랜드에서 연말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 춤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태를 집중조명함과 동시에 과거 발생한 임금체불, 갑질, 불법초과근무 등의 이슈를 함께 제기하며, 사회(S)분야 리스크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랜드 노조 측 또한 춤연습 이슈로 인해 이랜드의 임직원 권리 문제가 큰 관심을 받아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노조 탄압 등 과거 이랜드의 부정적 행보를 적극 밝히며 사건의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해외 사업장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제3자 기관을 통한 인권 감사(Audit)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감사 중심의 인권 실사에 대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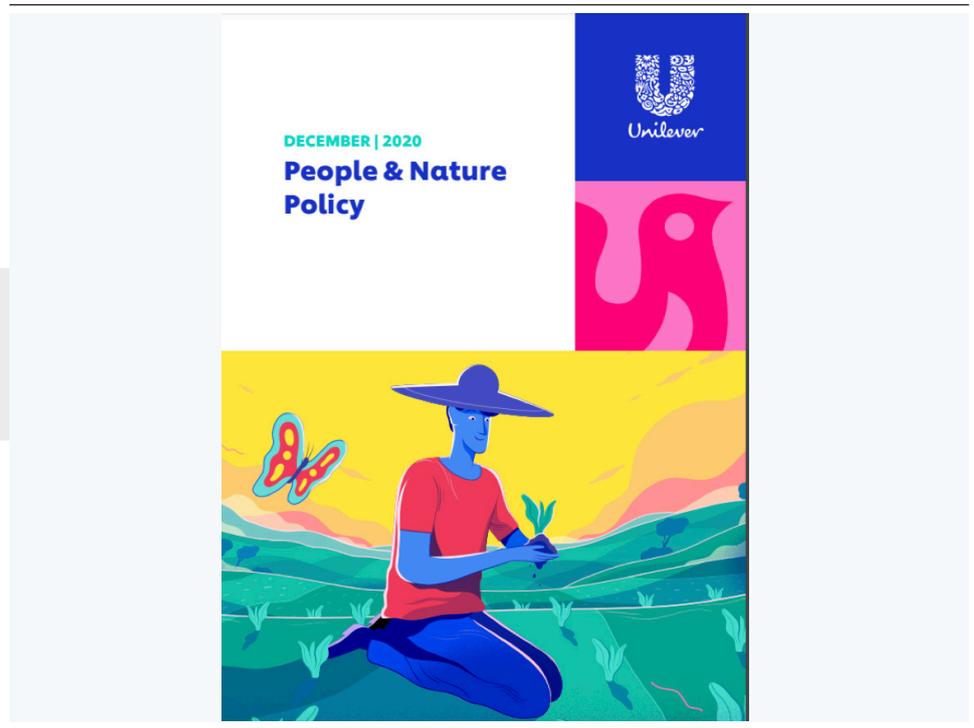
일례로 유니레버는 제3자 인증업체의 감사를 기반으로 공급망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했으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팜유 공급망 인권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했는데요. 이들은 지속가능한 조달 지침(RSPO) 및 인권보고서를 통해 팜유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도모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제3자 업체의 감사에 과도하게 의존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AP통신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폭언, 협박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유니레버는 공급망에 대한 간접적 인권관리가 리스크 관리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팜유 농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이들에게 인권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지 제분소와의 협력을 통해 약 400여개의 팜유 농장에 대한 맵핑을 수

행해 공급망에 대한 추적을 강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eople and Nature'이라는 농업 공급망 원칙을 수립하고 여성 학대 및 아동 노동 근절을 특별히 강조하는 인권 관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인권단체 옥스팜은 감사 중심으로 인권 실사를 수행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인권 이슈 파악에만 그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괴롭힘의 경우, 개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 피드백 수렴에 초점을 맞춰 익명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하고 노동자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 유니레버는 팜유 공급망 여성노동자 착취 스캔들이 발생하자 공급망인권관리 정책을 강화했다./유니레버



**재무·운영 리스크**

운영차원에서는 내부고충처리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중앙위원회가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90% 가량이 사내 고충처리제도로 인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세계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조사결과 91%이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제도의 세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고충처리제도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고충처리제도 수립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투명성과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특히, 고충접수 및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불안감, 수치심,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고충처리제도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옥스팜은 HR부서가 고충처리제도를 담당할 경우, 직원들이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HR부서가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다면 보상과 인사 부문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권단체는 직원들과 경영진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협의체 형태의 독립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고충처리 거버넌스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표방하는 파타고니아는 직원참여형 고충처리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 직원들로 부터 선출된 직원대표가 고충처리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는데요. 해당 대표들은 경영진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내 인권정책 및 고충처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임원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참여와 직급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파타고니아는 해당 기초를 공급망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지 고충처리 담당자를 고용해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가교역할을 하도록하고 현지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근로자의 피드백 채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 독립기구를 통한 고충처리, 본사 핫라인, 현장 별 담당자 신고접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림) 91%의 기업들이 고충처리제도를 수립했지만, 이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도는 낮은편이다./WBA



# 07 아동노동

### 글로벌 트렌드

- 코로나19 이후 일부 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 아동노동 이슈가 대두. 80% 이상은 농업 공급망에서 발생

### 법적 리스크

- 미국에서는 아동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아동노동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음. 아동노동 적발시 상당한 수준의 벌금 부과 가능성

### 이해관계자 리스크

-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합의 대두

### 재무·운영 리스크

- 아동노동과 연루된 협력사나 자회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외부압력으로 인해 기업들은 재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글로벌 투자자들도 아동노동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

## 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에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아동노동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신원보장이 미흡하거나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 아동들이 저임금 및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인권단체들이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아동노동의 70% 가량은 농업 공급망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산업 공급망에서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발도상국 시골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아동을 노동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아동노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아동노동의 9%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공급망에 대한 아동노동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 또한 팜유, 자동차 제조 공급망 등에서 아동노동에 연루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은 글로벌 인권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네덜란드는 아동노동실사법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EU 이사회를 통과한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서도 아동노동은 중대 인권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미국에서는 아동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일부 업종에서 아동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 났기 때문 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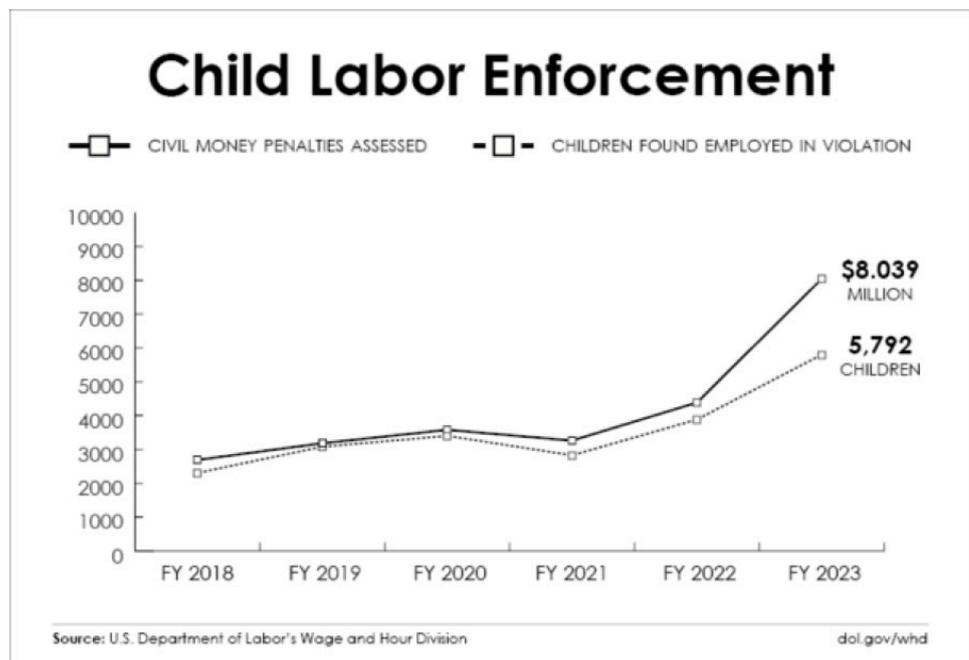
실제 미국 노동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동노동적 발률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소유한 ESG분석 전문 기업 엘리베이트(Elevate)는 아동노동에 대한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미국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등급을 ‘중간’에서 ‘높음’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은 낮은 편인데요. 아동노동이 적발될 경우, 고용한 아동 1명당 약 1만5000달러(2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주마다 벌금 규모는 상이함), 추가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 아동노동 적발에 대한 실사 의무나 법적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력사 아동노동 적발에 대한 원청기업의 법적리스크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 월마트, 제너럴 모터스 등 주요 기업에서 아동노동이 대거 적발되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 백악관에서 아동노동을 지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에 미국 노동부는 아동노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해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총 765건에 달하는 아동노동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회에서는 아동노동 적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동노동 적발시 벌금의 규모가 아동 1명당 1만5000달러에서 13만달러(약 1억 7000만원)로 증가하고, 상해 및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60만달러(약 8억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 미국 노동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아동노동집중단속을 수행했고, 이에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미국 노동부



**이해관계자 리스크**

공급망 솔루션 전문업체 이네로스(Ineros)가 수행한 2023 글로벌 공급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750곳이 공급망 ESG에서 가장 더딘 진전을 보인 분야는 ‘아동노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노동의 경우, 법적 규제가 부재하거나 이미 현지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기업이 해당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의 경우, 농업이나 광업 등의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서 이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2차, 3차 협력사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동노동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자발적 산업 이니셔티브나 아동노동근절 캠페인 등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IPEC), 아동노동근절 이니셔티브, 아동노동연합 등 공급망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코코아 산업등 아동노동 리스크가 높은 산업의 경우, 글로벌 산업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활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글로벌 의류업계의 경우, ILO의 아동노동근절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성행하는 면화 공급망의 아동노동을 근절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7년, ILO의 제3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국제공정무역기구(Fair Trade International), 베타 코튼 이니셔티브(Better Cotton Initiative) 등이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현지 공급망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H&M, 자라(Zara) 등의 주요 글로벌 의류기업은 해당 단체들과 협력해 ▲공급망 아동노동 모니터링 체계 수립▲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감사 및 추적 ▲지역사회 교육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 수행 ▲아동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중앙아시아 면화산업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설립된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은 우즈베키스탄 면화산업의 아동노동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고, 13년간 수행한 불매운동을 종료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최근 글로벌 투자자, 정부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아동노동과 연루된 협력사 혹은 자회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면서 아동노동으로 인한 재무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자회사에서 아동노동이 적발된 현대차의 경우, 미국 노동부에서 해당 시설에서 출시된 제품의 출하 및 배송을 금지한 바 있으며, 전미 자동차노조가 해당 문제 해결 전 까지 보조금 및 대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외부압력으로 인해 현대차는 해당 자회사를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또한 아동노동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아동노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밝혀지자, 23년 6월 주주로 참여한 기관투자자 30곳 (총 운영자산 1673조원 규모)은 공동성명을 내고 가맹점 전체의 아동노동 인권감사를 수행과 아동노동방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IMPACT ON

# 08 원주민 권리

### 글로벌 트렌드

-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과 ILO 협약 169호를 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무시하며 원주민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함

### 법적 리스크

-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는 원주민 권리에 존중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큼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원주민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

### 재무·운영 리스크

- 원주민과의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는 재무적인 손실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

## 글로벌 트렌드

원주민 권리 침해는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인권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는 원주민 권리에 존중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할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큼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부분이 사전인지동의 절차(Free, Prior, Informed Consent·FPIC) 무시인데요. 이는 사업자 측이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현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권리 침해와 피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침해되는 원주민의 권리로는 ▲자유권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재산권 ▲토지 및 자원 관리의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원자재 채굴,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인해 지역민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거나 농경지나 삼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현지 정부 및 기업과 사업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역민이 생존을 위해 건설,채굴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해당 지역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이나 정부가 무력으로 지역민을 탄압해 국제적 인권 사건으로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경우, 기업이 잠재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혹은 현지 주민과의 교류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급망에 대한 노동인권의 글로벌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제소송이나 사업 지연과 같은 리스크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리스크**

국제적으로 공급망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주민 권리가 침해될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주민들이 글로벌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후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개인 혹은 기관이 기후소송을 제기했기에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정부나 지역사회연합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지역 차원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기후소송에 대한 흐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미국 마카(Makah)와 쇼알워터 베이(Shoalwater Bay) 인디언 부족은 엑손모빌, 세브론, BP, 셸, 코노코필립스, 필립스 66의 6개 석유 업체를 대상으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자연 재해, 보건 영향 등으로 인해 인디언 사회가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석유회사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카와 쇼알워터 베이 부족의 거주 구역은 워싱턴 주 연안 지역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업 피해 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원고 측은 기업들이 최소한 1959년부터 화석 연료가 기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규모 석유와 가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원주민 권리/UN 원주민 권리 선언 (임팩트온 정리)

구분	내용	의미
개인적 권리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	
	생명권	살 권리, 고문이나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이동 자유, 거주 자유, 의사 표현 자유, 종교 자유
	평등권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재산권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 문화 유산 보호 권리
집단적 권리	원주민 공동체만이 가진 특별한 권리	
	자치권	자체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토지 및 자원 권리	전통적인 영도와 자원에 대한 권리, 개발과정에서 동의를 얻을 권리
	문화적 언어, 문화, 종교, 관습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권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교육권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권리

**이해관계자 리스크**

해외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사회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관여에서 중요한 것은 현지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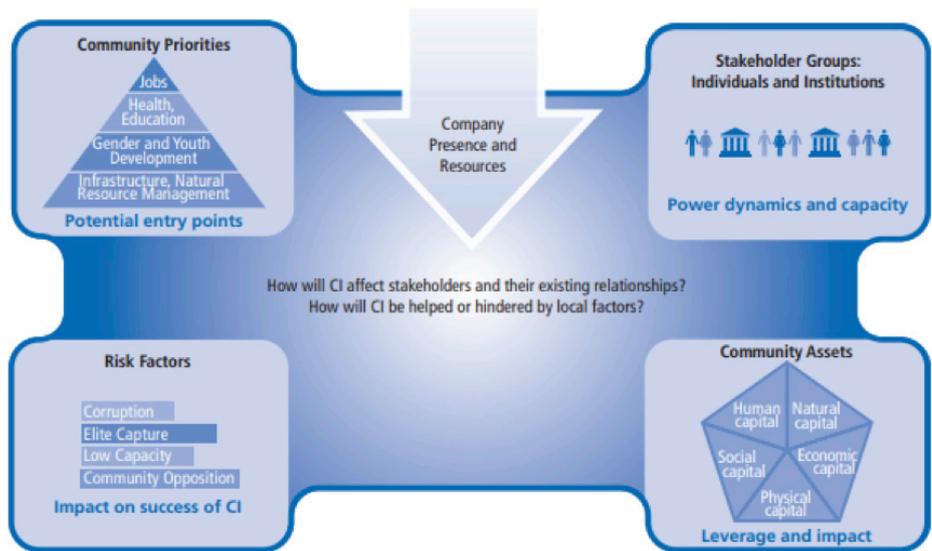
국제금융기구(IFC)는 지역사회 관여가 다른 이해관계자 관여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해관계자 관여의 경우,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관여의 경우,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축으로 이들의 의견과 의사결정을 수용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IFC는 이를 위해 ▲현지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및 니즈 파악 ▲지역사회 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파악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마을주민회의, 간담회, 익명 인터뷰 등) ▲취약계층, 여성 등 일부 집단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참여형 이해관계자 관여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금광업체 뉴몬트(Newmont)는 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금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물 채굴이 현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관여를 핵심 ESG 관리사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관여 정책을 수립하고 채굴 활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역내 사회적 맥락 파악 ▲소외계층의 참여 활성화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소통채널 구성 등에 집중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 국제금융기구(IFC)가 제시하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관여 모델/ IFC

Figure 3.1: Variables of the Local Context



일례로 가나의 브롱 아하포(Brong Ahafo)지역의 경우, 인구의 51%가 여성이며 금광 개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 가구 68%가 여성 가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내 여성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탄광 개발에 대한 금전 및 토지보상과 각종 지역주민 지원책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뉴몬트는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여성단체 및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 여성자문위원회(Women Consultative Committee·WCC)를 설립했습니다. WCC는 지역 내 10개의 마을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 95명의 여성 대표를 선출했고, 이들은 탄광의 환경영향 관리, 인프라 개발, 탄광개발 피해여성 지원 방안 등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WCC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탄광개발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뉴몬트는 탄광 직접고용,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한 저금리 대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장학금 수여 등의 사업을 수행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내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역량 및 자원을 적극 활용 했습니다. 특히, 농업 개선 및 토지접근성 강화(Agricultural Improvement and Land Access Program·AILAP) 사업을 통해 탄광개발로 인해 농작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작지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전수해 이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실제, 탄광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토지손실은 약 2400헥타르였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약 2600헥타르의 농작지가 새로 조성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됐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해외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지 기업이나 혹은 정부와의 합의를 마쳤을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이나 ILO협약을 살펴보면 잠재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민의 고충(Grievance)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탄자니아와 우간다 정부는 프랑스의 석유가스업체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국의 석유자원 개발 및 수송을 위해 동아프리카송유관(East Africa Crude Oil Pipeline · EACOP)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NP파리바, 시티은행, 도이치 은행 등 25곳의 주요 금융기관이 투자한 50억달러(약 6조73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송유관이 우간다 및 탄자니아의 주요 하천과 산림, 그리고 원주민의 농작지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가 밝힌 해당 사업의 잠재적 피해로는 ▲지역민 4000만명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빅토리아 호수의 하천 오염 ▲송유관 건설로 인한 1만4000여명의 원주민 토지 상실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 파괴로 인한 생태계 파괴 ▲3억 7400만톤의 탄소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EACOP사업의 계약이 확정된 후, 현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 정부가 지역민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대규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간다 정부가 EACOP사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강제로 체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글로벌 환경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전수 조사를 수행한 결과, 시공사 측이 환경 및 인권리스크를 은폐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주민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 사태는 국제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는데요. 주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비영리단체 300곳 이상이 공동서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투자중단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25곳 중 15곳은 투자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기관들이 해당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건설이 재개되는 듯 했으나 사업에 대한 자금확보와, 보험 가입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4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PACT ON

# 09 근로환경

### 글로벌 트렌드

·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을 강조하는 추세. 새로운 근로형태와 함께 초과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법적 리스크

· 근로시간 관리 및 임금 지급 문제 등 다양한 근로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만, 실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함. 주로 시정 조치로 해결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리스크

· 노동인권 문제로 인해 기업의 사회평가 점수가 하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

### 재무·운영 리스크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갈등은 근로손실을 유발하며, 대규모 파업은 기업의 큰 재정적 손실을 줄 수 있음

## 글로벌 트렌드

근로시간은 임금 다음으로 노사관계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MZ세대는 임금보다 워라벨(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비자발적 초과근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 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유형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3년 급격한 산업전환 및 근로환경 약화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을 강행하면서 파업 참여 노동자 수가 36만 2천명을 돌파, 2021년 대비 약 10배가량 폭증했습니다.

현장직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근로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 탈수증 등의 증세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인권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6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4억 규모의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3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제도를 오남용하여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법안 위반이 실제 처벌 사례로 이어진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법 위반이 드러나도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주로 시정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문제 발생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초과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7월 고용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조사 수행했고, 이를 통해 네이버가 지난 3년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관리 이후 네이버는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무급 6개월 휴가를 제공, 임금 10% 인상, 사내 이사회 산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구 신설,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막기 위한 설타운제도 등을 시행하며 사내 문화 쇄신과 평판 회복을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배달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부문에서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라이더 법'을 제정했습니다. 플랫폼 배달앱에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을 모두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국내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주 5일제 실시, 서버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2023년 1심에 이어 2024년 1월 항소심에서도 CJ대한통운이 간접고용 상태인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불공정한 근로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당한 근로환경 문제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네이버의 경우,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2년 ESG정기평가에서 그전 해 보다 한단계 낮은 점수인 A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근로환경 문제가 빠르게 전파되어, 리스크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에도 노조의 설문으로 인해 제기된 노동 이슈가 블라인드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UPS, 아마존, GM, 포드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파업, 시위, 기타 노조활동을 통해 임금개선 및 근로환경개선 분야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사측에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이전부터 노조의 요구를 무시해왔으나,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자 사상 처음으로 운송노동조합과 근로환경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영국(13일)의 3배이고, 미국(8.6일)과 독일(8.5일)의 4배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0.2일에 불과합니다.

국내 노동쟁의행위의 대다수는 근로환경 및 임금개선이 주요 이유인데요. 때문에, 근로환경개선과 노사관계 및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간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 전미노동차노조가 대대적인 파업을 강행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재정적 손실이 100억달러(14조원)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에 다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배터리 공장의 근로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MPACT ON

# 10 분쟁광물

### 글로벌 트렌드

· 분쟁광물 문제는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로부터 시작됨. 최근에는 친환경 산업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등에서 주로 발생

### 법적 리스크

· OECD 실사지침, 도드-프랭크 법안 등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함. 자발적인 공시가 이루어지는 추세

### 이해관계자 리스크

· 인권단체와 글로벌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분쟁광물 사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로 인한 기업의 평판과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재무·운영 리스크

· 분쟁광물 사용이 밝혀질 경우 급격한 계약 종료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외부 압력으로 인해 사업 철수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성

## 글로벌 트렌드

분쟁광물에 대한 논의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반군과 무장 단체가 점령 지역에서 채굴한 광물을 판매하여 무기와 군수물자를 확보하며, 채굴 과정에서 아동노동을 비롯한 노동착취와 학대, 내전으로 인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쟁광물은 주로 미국이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Act)에서 지정한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륨(Tantalum), 금(Gold) 등 4가지를 가리키며, 이들은 3TG라고도 불립니다.

책임광물은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라는 뜻으로, 분쟁광물의 개념을 확대한 용어입니다. 분쟁지역 밖에서 생산된 광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나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와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하자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리튬, 코발트 등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공급망에서 분쟁광물 이슈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법적 리스크

2010년 OECD는 분쟁국 및 고위험국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이 인권유린과 분쟁확산, 자금세탁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OECD 실사지침은 ▲5단계 실사 프레임워크 ▲광물 공급망 정책 모델 ▲위험 완화 기법 및 개선 측정 지표 ▲3TG에 대한 상세권고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기업은 자체생산 또는 위탁생산 하는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3TG가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추적을 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미국 법원에서 분쟁광물 의무공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산업계의 자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EU)은 OECD 실사지침을 바탕으로 2014년 분쟁광물 규제 초안을 발표하고 2017년 분쟁광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EU와 미국 등에서 분쟁광물 사용을 이유로 실제 기업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에 법적리스크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리스크**

분쟁광물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적은 것과는 별개로 인권단체, 글로벌 투자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미국의 인권단체 국제권리변호사회(International Rights Advocates, IRA)는 애플, 알파벳(구글), 델, MS, 테슬라가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지역 내에서 코발트를 수급하고 아동노동을 방조한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록 미국 법원 측은 기업과 아동노동 발생 간의 직접적인 연결점이 명확하지 않기에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코발트의 비율을 낮추고 니켈 함유량을 높인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선언했고, 공정코발트동맹(Fair Cobalt Alliance)이 결성되는 등의 개선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단체 ‘미얀마에 정의를’ (Justice for Myanmar)은 미얀마 군부 소유 가스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자금유입을 멈출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내에서도 HD현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목록에 포함되면서 논란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4년 4월, 셰브론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있는 광업 재단 (Responsible Mining Foundation)의 책임 광업지수 (Responsible Mining Index)는 광물업체의 비즈니스 윤리, 지역사회 복지,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분쟁광물 사용시, 해당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파푸아뉴기니 분쟁지역의 광산 개장을 강행했던 바릭 골드는 100점 만점에 10~40점 가량의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전자,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서 주의깊게 보는 지수이기에 국내 기업 또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운영 리스크**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광물 사용이 밝혀질 경우, 급격하게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기에 재무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애플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이 발견되자, 애플은 해당 협력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 분쟁광물에 대한 실사 강화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직접적으로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감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거세지자 광물채굴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분쟁광물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 압력이 거세질 경우, 분쟁 지역의 사업을 철수하거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토탈과 세브론은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에 대한 지분을 각각 31%, 28%보유하고 있었으며, 인권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이를 전량 매각했는데요.에너지 컨설팅 전문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세브론이 보유했던 지분의 가치는 약 2억~2억5천만달러(3340억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토탈에너지스에 따르면, 야다나 가스전 운영을 통한 수익은 약 1억5백만달러(1400억원)인데요. 이는 수익 대비 지분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토탈에너지스와 세브론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했기에 재무적 손실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PACT ON

---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IMPACT ON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59, 4층 (03983)
- 대표전화 : 02-777-0603,
- 이메일 : master@impacton.net